

CDC,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



▲ CDC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법원의 제지에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DC는 전날 2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행기, 열차, 버스, 공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수단과 실내 시설에서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쓰라는 지침을 내리고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세, 변이 출현의 영향, 향후 추세를 고려한 권고라고 설명했다.

CDC는 이날 권고에서 "마스크는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며 "환기가 잘 안 되는 밀집 장소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18일 CDC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마스크 자체에 바이러스를 정화 할 기능이 없는 만큼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공중보건이 증진된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결정의 주요 근거였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이뤄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했다.

그러나, CDC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 법무부는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백신도 보급됐지만, 감염 취약층 때문에 공중보건 위협이 존재한다고 본다.

로셸 월런스키 CDC 소장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은 개인과 공동체를 지킬 수단"이라고 말했다.

낱말퍼즐 정답

1	구			2	잔	병	치	3	레
4	단	순	5	호	치				슨
6	선	주		신		7	설		
발		8	한	술		9	거	주	10
11	대	역	사		12	유	지		렛
		리		람		13	인	대	
14	막		15	우	선	순	위		
16	사	필	귀	정				적	

역대급 구인난,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월 퇴사자 수가 450만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기업들의 구인 규모 역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는 낮은 임금 인상을 속에 미 노동시장 공급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

4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전날 '구인·이직률 설문조사(JOLTS)'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3월 퇴사자 수는 한 달 전보다 15만2,000명 증가한 454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월 구인 규모 역시 2000년 12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인 1,155만 명에 이르렀다. 팬데믹 이후 위축된 노동 공급이 좀체 되살아나지 않고 있



▲ 심각한 구인난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사진=shutterstock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만큼 기업들의 구인난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주로 보건·육아 문제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한 불안이 높고, 아이 돌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취업전선에 나설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재계는 부족한 노동 공급을 메우기 위한 이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구인난은 에너지·식료품 가격 급등과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4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기업들이 직원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임금을 높이고, 이로 인한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는 이른바 2차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낙태권 보장' 합헌 판례 뒤집힐 듯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하는 방안을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3년 판결 이후 50년 가까이 유지돼 오던 낙태권 합헌 판례가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낙태 행위 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 라며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이다. '임신 약 24주' 후부터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념비적 판결로 여겨져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낙태권이 연방 헌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주별로 정치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한 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강한 중



▲ '낙태 합법화를 촉구하는 미 워싱턴DC 시위대 모습. 사진=shutterstock

서부와 남부의 22개 주에서는 '낙태의 불법화'를 추진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NYT는 서부와 남부의 저소득층 여성 사이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크게 줄어들겠지만, 일부 여성은 낙태가 합법인 주로 '원정시술'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흑인이나 라틴계, 10대, 무보험자, 서류 미비자 등 '취약계층 여성'이 가장 곤경을 겪을 것으로 목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